

MB 기업정책과 한국경제

발행일 | 2010년 2월 24일

장 소 | 참여연대 느티나무홀

제 작 |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

* 본 자료는 참여연대 시민경제교실 강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, 개인 학습용으로만 사용하시고, 재인용을 금지합니다. 자료이용에 대한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(02-723-5052)로 해 주십시오

MB 기업정책과 한국경제

곽정수 / 한겨레 대기업 전문 기자

I. MB 정부의 기업정책

- 친 기업 아닌 친 재벌정책
 - ‘기업’에는 대기업부터 중견기업, 중소기업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가 내포
 - MB 정부의 기업정책은 친 대기업, 친 재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
- 규제완화(deregulation)
 - 규제완화 이전에 필요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, 즉, 환경규제, 노동규제 등을 완화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음
 - MB정부의 규제완화는 필요 없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보다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해 친 재벌, 친 대기업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음
-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
 - 자산총액이 10조가 넘는 기업들에 한해 자기 자산 40%를 초과해 타 기업 주식 매입 금지
 -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 이었던 재벌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금지
 -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
- 금산분리
 -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
 - 금융자본이 고객들 돈을 보험금, 배당금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총수의 유지·지

배력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금지해 왔던 것

-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7% 소유, 투자 목적의 주식 아닌 지배체제 유지 목적, 삼성생명 고객들의 이익을 위한 돈이라고 볼 수 없음
- 외환위기 이후 대우 증권사가 고객들한테 받은 돈을 우량채권이나 주식 사서 고객 자산 불려 준 것이 아니라 대우 계열사를 채권 매입하는데 사용했음이 밝혀짐
- 금융사들이 충수의 지배력을 유지·확장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 갖고 있는 예는 부지기수고, 과거에는 경영이 어려웠을 때 빼서 쓰기도 함. 이런 상황에서 금산분리가 완료되면 금융사는 재벌들의 사금고화 될 수 있음
- 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구조조정 기능도 상실할 우려 있음

○ 대기업 조사완화

- MB정부,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기업들 세무조사 사정완화 하겠다고 밝힘
- 지난해 말 LPG 가격담합, 올해 초 소주값 담합과 같은 행위 조사 안한다는 것에 다름 아님
-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 보게 됨에도, 소비자들은 이를 인식 못하고 정책에 동조

○ 기업인 사면복권

- 위법행위를 한 기업인에 대해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이유로 사면
- 죄를 저질렀음에도 기업인을 사면 복권 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림
- 경제 기본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, 엄하게 처벌해야

○ 감세정책

- MB정부, 법인세 소득세 중부세 완화
- 감세정책의 혜택이 많은 경우 재벌들에게 귀속됨

II. 지난 2년, MB 정부의 경제 성적

○ 이미 잊혀진 '7·4·7' 대선 공약

- '잃어버린 10년', '경제 파탄' 났다던 노무현 정부 평균 경제 성장률 4.34%
- MB 정부 이후 2008년 경제성장률 2.2%, 2009년 0.2% 올해 목표인 5% 달성해도 2.47%

○ 실업률,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

- 노무현 정부 평균 실업률 3.54%, 2008년 3.2%로 개선되었다가 2009년 3.6%로 증가
- 비정규직, 노무현 정부 5년간 570만 명. 2008년도에 544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 같더니 575만 명으로 늘어남

○ 임금증가율 하락

- 참여정부 평균 명목임금증가율 6.6%, 실질임금증가율 3.6%
- MB 정부 이후 2008년 명목임금증가율 3.1%, 실질임금증가율 -1.6% 2009년 9월에는 명목임금증가율 -1.2%, 실질임금증가율 -3.3%

III. MB 노믹스의 오류들

○ MB 노믹스는 '폭풍 속에서 고장 난 나침반으로 항해하는 배'와 같아

- 고장 난 나침반이 경제정책, 폭풍은 경제위기, 선장이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어 우리 모두가 탄 배가 더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

○ 경제 원칙의 실종

- 자본시장 육성하겠다고 해서 포이즌 필 도입해 투자자들의 기회를 축소시킴
- 결국 재벌의 경영권만을 보장하겠다는 것, 경영실패에 대한 무책임을 용인하겠다는 것
- 포스코의 경우에는 민영화되었음에도 정부가 기업경영에 개입 했다는 의혹이 나옴
- 일자리 창출 소리 높이면서 한쪽에서는 구조조정 부추겨, 인턴 같은 한시적 정책으로 일관
- 시장의 공정한 심판역할 해야 할 정부, 대기업 편향정책 일관해 중소기업, 소비자에게 피해

○ 경제의 구조적 변화 외면

- 트리클 다운 효과 'Trickle-down effect' 실종
- 대기업 잘되면 중소기업도 잘된다는 이야기는 옛말
-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10% 이상 나오고 호황을 누림에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1.8%에 그

쳐

-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낮은 상태에서 변화 없어 대기업 호황 누려도 중소기업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지 않음
- 이익 늘어나도 고용 늘리지 않아, 작년 사상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대기업, 오히려 고용 줄여 '고용 없는 성장' 계속

○ 시대 흐름에 역행

- 신자유주의 정책 되돌아보자는 세계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MB 정부 정책은 거꾸로 금산분리 완화하고 감독완화 하자고 주장
- '선진화' 주장에도 법치주의, 민주주의는 '후진화'

IV.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한 시점

○ 낡은 패러다임, 이제는 바뀌어야

- 트리클 다운 효과에 집착해서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잘사는 국가 만들기 어려워
-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 중요
- 재벌의 패러다임과 경영철학 바뀌어야 중소기업도, 소비자도 살 수 있는 구조 마련 될 것



정부지원금 0%,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

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

회원가입 02-723-4251 www.peoplepower21.org

시민경제위원회 02-723-5056 blog.peoplepower21.org/economy